



제2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2018. 9.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7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 회의
 - 장소/일정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18.8.6(월)~7(화)
 - 참석 : APEC 회원국 대표(21개국), OECD, TI 등 국제기구 70여명
 - 주요 의제
 -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 사항 보고
 - ACT 이니셔티브* 및 국제포럼·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공유
- * 2018 APEC ACT 이니셔티브 : '디지털 시대와 부패예방 및 척결'

□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8.4(토)	인천 (20:05)	브리즈번 (06:50)	· 대한항공(KE0123)
8.5(일)	브리즈번 (10:40)	포트모르즈비 (13:50)	· 에어뉴기니 항공(PX004)
8.6(월)~7(화)	포트모르즈비		· 제27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8.8(수)	포트모르즈비 (14:10)	창이 (18:30)	· 에어뉴기니항공(PX392)
8.9(목)	창이 (22:35)	인천 (05:55)	· 대한항공(KE0644)

□ 주요 논의내용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13개 회원국(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뉴질랜드, 미국,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이 발표
- ※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 마련 노력과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 보완 노력 소개

○ 자원산업분야에서의 부패예방 중요성 강조

- 미국, 칠레 등이 자국의 자원산업 투명성 제고 노력을 소개하였고, 인터폴은 자원개발 범죄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사법공조를 요청

○ 2018 APEC 반부패·투명성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 검토

*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외교부, 산자부)로, 11월 개최 예정

- 회원국은 부패자산 몰수를 위한 사법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과, 법률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부패척결(combating)'이라는 표현을 '부패의 범죄화(criminalizing)'로 수정하기로 합의
- 회의 미참석 국가들에게 수정본을 회람한 후, 선언문을 확정기로 함

▶ 차기 제28차 ACTWG 회의는 '19년 2월중 칠레에서 개최예정(주제 미정)



<제2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실무회의>

- ♣ 붙임 : 1. 제27차 ACTWG 회의 상세결과, 2. 한국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등 보고자료
3. 2018 APEC 반부패·투명성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초안)

제27차 ACTWG 회의 상세결과

□ 의제 1 : 의제 채택

- 26차 회의 요약보고서는 이견없이 채택되었고, 의제4 관련 대만과 베트남이 추가 발표 의사 표시

□ 의제 2 : APEC 사무국 보고

- 2018 APEC 프로젝트 상반기 결과 및 하반기 중간보고
 - ※ 1차 프로젝트 펀딩 지원 요청 승인률 : 58% (승인 53건/지원 95건)
 - ※ 2차 프로젝트 펀딩 지원 요청 수 : 115건('18.7월 기준)
- 2018년 도입된 APEC 펀드 신청절차 재안내

절 차		내 용
1 단계	컨셉노트 (Concept Note)	각 회원국은 양식에 따라 컨셉노트를 작성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산하 그룹/위원회에 컨셉노트 제출 - 프로젝트의 목적, 수행방법, 펀드출처, 공동후원국 등 포함
		산하그룹/위원회 승인 획득 후 사무국에 컨셉노트 제출
		사무국은 산하그룹/위원회에 컨셉노트별 점수부여 요청 - 획득한 점수에 따라 펀드별 순위를 결정, 높은 순위부터 펀드별 가용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 선정
		예산운영위원회(BMC) 승인
↓		
2 단계	사업 제안서 (Project Proposal)	각 회원국은 승인된 컨셉노트에 한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 산하그룹/위원회의 승인 획득 후 사무국에 제출 -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작성
		사무국은 사업 제안서의 효율성, 적합성에 대한 평가 진행
		예산운영위원회(BMC) 승인 * 20만불 이상 지원시 고위관리회의(SOM) 승인 필요

□ 의제 3 : 2018 ACT 활동 방향

- 파푸아뉴기니는 작업계획(WorkPlan)을 소개하며 올해 예정된 APEC 워크숍·회의·훈련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계획 안내

	활동계획	시기	개최국
1	· APEC 부패예방 매커니즘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2.24	파푸아뉴기니
2	· 제26차 APEC ACTWG 회의	2.25-26	파푸아뉴기니
3	· 자산회수에 관한 APEC ACT-NET 트레이닝 워크숍	3.20-22	태국
4	· 제26차 APEC ACTWG 회의	8.6-7	파푸아뉴기니
5	· 제5차 ACT-NET 회의	8.5	파푸아뉴기니

- ACT 2013-2021 전략계획 관련, 미국과 칠레가 추가 의견 표명
 - (미국) 해외뇌물 적발(detection)과 관련 법 집행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호주, 캐나다가 이에 찬성함
 - (칠레) 차기 의장국으로서, 승인된 전략계획에 따른 작업계획을 現의장국(파푸아뉴기니)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

□ 의제 4 :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발표

-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기관*이 발표

※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국가별 주요 발표내용]

▶ 한 국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 제1주기 점검 완료('14) 및 제2주기 점검 진행중(~'16)
-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니우에(Niue) 점검 예정

○ 주요 반부패 활동

-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 마련)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간 협의회를 발족 및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고위 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의무화,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 공무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및 민간에 대한 인사 혹은 출연요구 부정청탁 금지

②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보호조치 결정 후 이행여부 점검, 긴급구조금제도 도입 등

※ 동 의제에 대한 한국의 상세 발표자료는 [붙임2] 참고

▶ 말레이시아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 UNCAC 2장(예방조치)·5장(자산회수) 검토 보고서가 발행되었으며('17.11), 동 검토보고서에 아래 우수사례가 언급됨

- 1)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조직 부패리스크 정도에 따라 분류된 청렴 전담조직 신설 의무화
- 2) 국가청렴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발행 및 부패인식조사
- 3) 모든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부패 관련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사용 추진
- 4) 우수한 청렴교육제도(Corporate Director Leadership, Integrity Course)
- 5) 정부 조달과정에서의 청렴협약 및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 주요 반부패 활동

- 반부패법에 ‘기업의 책임조항(Corporate Liability Provision)’ 도입
 - ※ 뇌물의 10배 혹은 2.7억 상당의 벌금,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 가능
- 국가 거버넌스 · 청렴 및 반부패 센터(GIACC)* 설립('18.5)
 - * 모든 국가정책이 굿 거버넌스, 청렴성 및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총리직속 기구

▶ 뉴질랜드

○ Anti-Corruption Work Programme 소개

- 기업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국제규범(OECD 뇌물방지협약, UNCAC 등)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범국가적 프로젝트
 - ※ 현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각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임

□ **의제 5 :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현황 보고**

○ 베이징선언 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3개 회원기관*이 발표하였음

* 파푸아뉴기니, 칠레, 중국

※ ‘베이징선언문’은 법 집행 기관간 사법공조 강화 내용을 담은 선언문으로,
각국 사법당국의 자산회수·범죄인 인도·부패수익 환수 이행 내역 공유

▶ 칠레

○ 자금세탁범죄의 국제협력사례 소개

- 거대 건설사 Lava Jato의 칠레 내 자회사 OAS가 탈세, 불법 선거운동 지원, 자금 세탁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전문성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내역을 발견하고 조세범죄 수사 개시
- '17. 2월 칠레에서 전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검찰총장을 초청, 이 중 11개국 검찰총장이 위 사건의 수사에 협력기로 합의
- 이후 검찰청, 법집행기관이 협력하여 합동수사팀(Joint-Team)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칠레 검사가 브라질 검사와 함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공조 수사 진행
- 또한 공식적 형사사법공조 전 자산관련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기존 법률은 마약, 자금세탁범죄만 대상 범죄로 함)
- 현재 공식적 수사가 진행 중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 중
- 이 사건은 ① 최초로 검찰총장 수준의 공식·비공식 협력이 이루어졌고 ② 합동 수사의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③ 에그몽 그룹 등의 긴밀한 협력 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관련 정보 제공이 긴밀하였으며 ④ 국내법 개정 발의 등 향후 진정한 사법공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중 국

○ 자금세탁분야의 협력 강화

- 4개 기구의 연합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가 감시·분석센터 (CAMLMAC) 신설('18.2월)
- 중범죄자 송환, 자금세탁범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15),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서 관련 거래정보·매칭에 차이가 나는 정보 분석 ⇒ 법집행 기관에 배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가능
- CAMLMAC의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국내회사의 해외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법집행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정보 분석기구(FIU)에서 해당 계좌를 분석하여 그 흐름을 법집행 기관에 보고하여 부패범죄를 추적한 사례가 있음
- 향후 CAMLMAC과 국내외 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 파푸아뉴기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 방지

- 형사사법공조법('11) 및 형법 개정('15)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를 형벌로 규정
- 파푸아뉴기니는 '11. 금융행동테스크포스(FATF)의 그레이 리스트 (Grey-list,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 방지 등에 대한 협조가 불충분한 국가 목록)에서 해제되었고, 자금세탁방지(AML)/금융테러방지(CTF) 기술개혁에서 빠르게 발전 중
- 파푸아뉴기니의 경찰수사는 ① FATF의 정보 제공 ② 국가의 사기 (Fraud), 부패범죄(Corruption) 고발, ③ 감사보고서, ④ 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출 등을 단서로 시작됨

- 세관, 국세청, 검찰, 기재부, 감사원, 지역개발개선부 등 기관 간 협력 및 파푸아뉴기니 검찰의 형사처벌, 형사몰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소송 진행 중으로, 현재 자금세탁 범죄는 1건만 기소 및 유죄 판결 선고됨

□ 의제 6 : 자원산업분야 부패 예방 방안 논의 및 보고

- (파푸아뉴기니) 2018 APEC 주제에 따라 논의 중인 지속가능개발에 논의의 일환으로 자원산업분야 중 농업, 어업, 광업, 삼림에 대한 내용이 해당 실무그룹에서 논의되고 있음
 - 반부패·투명성 실무그룹에서도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개발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 (칠레) 새로운 의제 논의를 기쁘게 생각하며, 칠레는 자원개발 분야 중 광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 중
 - 불법 채굴은 대다수의 남미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 특히 칠레 경제의 대부분이 채굴산업으로 인한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바 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함
 - 칠레 정부는 채굴산업 관련 회사에게 미화 40불 이상의 선물과 200불 이상의 행사에 대한 초대를 모두 신고토록 의무화 함
 - 또한 채굴산업 관련 회사의 예산, 자산 운용, 임금 등의 내용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투명성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함
 - 산업폐기물 분야에서는 '16부터 산업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전자 프로토콜(Electronic Protocol)을 운영 중에 있음

- 칠레 정부는 최근 채굴·어업 관련 부패사건을 기소한 바 있음
 - ※ 특히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칠레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역 21년과 더불어 미화 50만불 상당의 벌금이 선고되었음
- (미국) 자원개발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원 거래와 자금 운용 정보를 Open Data Protocol에 따라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 투자를 통하여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음
 - ※ 동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에서 공공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는 측면과, 민간분야의 시민사회 단체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 두 가지로 이루어짐
- (인터폴)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초국가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국가 간 적극적인 조사 협조가 필수적임.
 - 현재 인터폴에서는 삼림분야 관련 대형부패 범죄 2건에 대해 금융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직화된 범죄와 연결 가능성도 추적 중에 있음.
 - 인터폴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자원개발 분야 투명성 제고에 기여코자 하며, 인터폴의 자원과 정보가 하나의 도구(tool)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멕시코) 자원산업분야 부패척결 및 투명성 제고 사례소개
 - ① 채굴산업분야(Mining Sector)
 - 불투명한 채굴권에 기인하는 부패요인 제거를 위해 채굴권 발급, 운영 및 관리 전반의 현대화(modernization) 작업 필요

- EITI 프로젝트 : 정부, 기업 및 시민단체가 함께 자원분야 계약 · 채굴 · 거래 등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표준 마련

② 에너지산업분야(Energy Sector)

- 국가 독점체제에 따라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청렴도 수준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문제점 지적
- 에너지 산업분야 청렴도 제고 프로젝트('17) :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 발굴 프로젝트

※ 지난 1년간 96개의 규제개혁과 43개의 제도개선 성과를 이룸

□ 의제 7 : 제안 · 진행중 프로젝트 및 ACT 이니셔티브와 국제포럼과의 협력

○ (중국 · 태국) 자산회수 관련 ACT-NET* 워크숍 결과 공유

* ACT-NET이란 APEC 회원국내 반부패 수사 공조 등을 위해 회원국 내 법 집행 기관간 발족한 회의체임

- 지난 3월 중국과 태국은 자산회수 관련 전문가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집행 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
- 동 워크숍에서는 APEC 회원국에 대한 부패자산회수관련 권고안 10개 항목을 도출하였음

※ 부패에 대한 무관용의 법칙(zero tolerance for corruption), 협력에 대한 장애물 제로의 법칙(zero obstacle for cooperation) 등 포함

- 또한 책임(Commitment), 협력(Cooperation),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의 첫 글자를 딴 3C 원칙을 수립
- 자산회수는 초국가적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공조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국가별 특수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동 워크숍 결과문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권고안에 대한 APEC 승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논의

○ (베트남) 2018 APEC 부패예방 우수사례 모범사례 취합 결과 공유

- 지난 1년간 50여개의 우수사례가 수집되었으며 베트남은 이를 취합하여 APEC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공유할 예정임
- 올해 두 번째로 우수사례를 취합하였으며 현재까지 칠레, 중국, 대만 등을 비롯한 회원들의 우수사례 14건이 제출되었음
- 관련 사례를 더 많이 수집하여 활용도 높은 결과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APEC 사무국을 통해 안내문을 공지토록 할 예정

※ 칠레는 동 결과물에 대한 토론과 활용방안,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등을 내년 공식 ACTWG 의제에 포함할 것을 제안

○ (ACT-NET) 제5차 ACT-NET* 회의 결과 보고

- 제5차 ACT-NET 회의에는 호주, 캐나다, 중국, 홍콩, 인니,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베트남 등 16개 회원국 참석
- 동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뇌물·자산회수 사례와, 국가·지역별 법체계 소개 등 범집행 기관간 네트워크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 자금세탁·자산회수 사례에 대한 국가별 정보 공유 필요성 강조
- 동 회의에서는 회의 참석률 제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지속적 불참국에 대해 회원 제명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언급됨

□ **의제 8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에 대한 보고**

○ 인터폴(INTERPOL)의 반부패활동 소개

- (역량강화 및 훈련) '12년 이후 21개 워크숍 · 지역별 훈련 진행 및 자국법 내에서의 효과적 반부패 활동 지원
- (StAR Global Focal Point Platform) 수사당국간 민감한 정보의 적시 공유와 연락 채널 유지를 위해 임명한 인적 네트워크
 - ※ 133개국 236개 인력을 Focal Point로 운영 중('18.8월 기준, 한국포함)
- (Operational Support) 각국 사법당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 · 업무 흐름표 제공 · 매칭 Task Force 등 제공

□ 의제 9 : APEC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검토 및 승인

- 중국은 APEC 회원간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ACT-NET 훈련 · 워크숍 결과에 지지를 표하는 문구를 선언문에 추가할 것을 요청
 - 또한, 자산회수 과정 전반을 언급하기 위해 재산 몰수(confiscation) 외에도 추적(tracing), 동결(freezing)을 추가할 것을 요청
 - 칠레 · 파푸아뉴기니 · 캐나다 등은 실무그룹 내 워크숍을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고위급 선언문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미국은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부패 척결(combating)을 부패의 범죄화(criminalizing)으로 수정할 것과, 유엔반부패협약, 베이징 선언, APEC 반부패 노력을 동등한 수준에서 언급하도록 수정 요청
- 사무국은 상기 내용을 반영한 선언문 수정안을 추후 회람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각료회의 선언문을 확정기로 함
 - ※ 2018 APEC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원문은 [붙임3] 참고

한국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등 보고 발표자료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Thank you Mr. Chairma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각) monitoring mechanism and Korea's major anti-corruption activities.

1. 이행 점검 체계 참여 현황

I will start with Korea's UNCAC implementation status

Korea signed the UNCAC on December 10, 2003 (two thousand three). The convention was ratified on March 27, 2008 (two thousand eight) and took effect on May 26th of the same year.

According to the monitoring mechanism under UNCAC Article 63, paragraph 7, the first review cycle of Korea on Chapter 3 (Criminalization & law enforcement) and Chapter 4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ompleted in 2014 (two thousand fourteen).

From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taking part in the second review cycle of Chapter 2 (Preventive measures) and Chapter 5 (Asset recovery). With Vietnam, Korea monitored Solomon Islands, and the Executive Summary was completed. This year, Korea will monitor Niue(니우에) with Saudi Arabia.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Now let me explain ACRC's major anti-corruption achievements.

After taking office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ushed strong anti-corruption policies to realize its state vision, "Korea, a just nation and a nation of the people." As Korea's primary anti-corruption agency, the ACRC is striving to build a foundation for anti-corruption reform and ensure effective anti-corruption by improving anti-corrup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rst, for stronger anti-corruption reform, the ACRC launched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and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and announced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was set up in October last year to discover government-wide anti-corruption tasks and expand inter-government agency cooperation to fight corruption. The council meeting is chaired by the President and attended by anti-corruption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ACRC,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It is designed to support comprehensive and systemic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March this year,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was launched to establish public-private anti-corruption governance. The council consists of 30 representatives of each sector, such as economy, civil society, media, and academia. It guarantees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entire anti-corruption policy procedure, from establishment, monitoring and to assessment of anti-corruption policies.

After discussed by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was announced at the second Anti-Corruption Council meeting. The comprehensive plan is Moon Jae-in administration's long-term anti-corruption road map. The plan was drawn up based on anti-corruption policy tasks discovered by each government agency and public opinions collec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channel. It contains 50 anti-corruption task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addition, to ensure effective corruption prevention, the ACRC adopted conflict-of-interest prevention system and enhanced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legislation.

In April this year,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as amended to includ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Under the amendment, public officials should report personal

interests that might prevent them from performing duties in a fair manner.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submit their private business activity details for the three years before their appointment.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duty-related commer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of their families are restricted. Plus, public officials are prohibited from making improper solicitation to private companies requesting employment or contribution.

Lastly, by amending Public Interest W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ACRC has strengthened protection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he amended Act increased the maximum monetary rewards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o 3 billion won, or 30 million US dollars. It also imposed punitive damages on those who took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 whistleblower. They should pay three times of the losses due to the disadvantageous measures. Under the amendment, ACRC will monitor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for two years after issuing such measures. Relief money will be provided to whistleblowers before the reward deliberation board decision comes out, if it is deemed urgent.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참여 현황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이행현황임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에 유엔반부패협약을 서명하였으며, 2008년 3월 27일에 비준하였고, 2008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음

유엔반부패협약 63조 7항에 따라 마련된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한국의 제1주기 제3장 ‘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 ‘국제 협력’ 부분에 대한 점검이 2014년에 끝났음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2장 ‘예방조치’와 5장 ‘자산 회수’에 대한 제2주기 이행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점검하였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요약 보고서(Executive Summary)가 완료되었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니우에(Niue)를 점검할 예정임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권익위가 실시한 주요 반부패 활동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권익위는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①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②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먼저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지난해 9월 신설된 ‘반부패정책협의회’란 범국가적 주요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동 협의회는 권익위, 공정위, 법무부, 국방부 등 부패 해결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형 부패 방지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올해 3월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발족되었음. 동 협의회는 경제, 시민사회, 언론 및 학계 등 각계 대표 30인으로 구성되며 반부패 정책의 수립, 점검 및 평가의 정책 전 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지난 4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동 종합계획은 부처별 과제 발굴 및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및 50대 과제를 담고 있음.

다음으로 권익위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였음.

올해 4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한국의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금지되고 공무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등이 제한되며 민간에 대한 인사 혹은 출연 요구 등의 부정청탁이 금지되었음.

마지막으로 지난 5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신고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된 후 2년 동안 권익위에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였으며 긴급구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였음.

2018 APEC 반부패·투명성 분야 각료회의 선언문(초안)

[원 문]

We reaffirm our commitments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domestically and globally, to ensure transparency, and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 in conjunction with APEC commitments to combat corruption.

We acknowledge that tackling corruption requires collaboration and a holis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and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promoting cross-border coordination on repatriation or extradition of corrupt officials as well as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ion proceeds, combatting foreign bribery, and denying safe havens for corrupt officials and proceeds of corruption through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ACT-NET). We remain cognizant of the equal importance of our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promote transparency and good governance, and strengthen the rule of law. We encourage APEC to continue its efforts in this regard.

[국문번역본]

우리는 부패를 국내외 부패를 예방·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APEC 협약과 함께 UN반부패협약, 베이징선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이전 약속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부패척결은 협업이 요구되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APEC의 ACT-NET을 통해 부패수익의 몰수 및 환수, 외국 뇌물 수수 근절, 조세피난처의 부인뿐만 아니라 부패 공무원의 본국 송환 또는 인도에 관한 협력 강화와 국경을 넘어선 협력 촉진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부패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투명성을 촉진하고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 선언문 최종본은 제27차 ACTWG회의에서 제기된 회원국들 의견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확정될 예정임